투 톱 체제 與 '李 리스크' 묘수 찾나

〈준석〉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구축…윤리위 추가 징계 임박
경찰 '성 접대 의혹 사건' 송치 여부 곧 결정…李측도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 톱'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준석 리스크'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이에 맞물린 당 중앙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면서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라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막판까지 정치적 봉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표 사건의 송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성 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났지만,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며칠 남은 상태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만약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로 결론을 낸다면 윤리위는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표에 대해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으로 직전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내부적으로 성 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라면서 "윤리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지지 않고 추가 가처분 신청 등 총력 대응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징계에 반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책임당원들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를 이끄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제명을 결론에 세워놓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끝까지 간다"고 썼다.

공교롭게도 윤리위가 예정된 28일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그것은 윤리위 소관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 비록 평의원 시절이었다고는 하지만 지난달 당 윤리위원이던 유상범 의원과 나눈 '이준석 징계 문자'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 전 대표와의 화해가 난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당내에서는 양측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전망과 함께 마지막까지 정치적 타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산발적으로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역 정치권 '민형배 복당' 공식 요청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 민주당 지도부에 첫 건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광주시당 위원장이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의 복당을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광주시당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요청해 향후 당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이 이 같이 요청했고, 일부 참석자들이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도 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에서 이 위원장의 민 의원 복당 요청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이재명 대표가 서둘러 논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당에 반대하는 의견이라기 보다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실상 '꼼수탈당'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의 위원을 배정한다. 이에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기 위해 탈당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민주당 당원 청원이 진행됐고, 지난 9일 최종 2만4530명이 동의하면서 종료됐다. 이에 따라 5만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청원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청원은 30일간 당비를 낸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민주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신정훈 "후쿠시마 오염수로 수산물 안전 우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수산물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 저조와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2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은 6099톤으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0.16%에 불과했다. 국내생산 수산물 중 수산물이력제 표시물량의 비중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16%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다. 오히려 수산물 이력제 참여 품목은 2020년 45개에서 올해 기준 42개로 줄었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 수산물 유통 투명성을 위협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투명한 이력관리와 원산지 표시체계 없이는 후쿠시마 공포로 인한 수산업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재갑 "농업인 공익형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0일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 56만 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도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최초로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한정된 예산 문제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윤재갑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다. 이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농민 56만 명이 마침내 직불금을 수령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본격 의정혁신 작업

혁신추진단 발족…조직 개편, 제도·정책 등 논의

광주시의회가 9대 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의정 혁신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조직과 인사, 제도와 정책, 의회 공간 운용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를 위해 박남언 의회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의정혁신추진단을 발족했다.

의정혁신추진단은 사무처 내 각 부서장과 실무 직원이 참여하고 지방자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정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의정혁신 추진 절차는 외부 전문가 토론과 내부 구성원 논의를 거쳐 혁신과제를 도출한 뒤 혁신과제별 세부 실행 방안 수립, 의정 혁신 종합계획(안) 검증 토론을 거쳐 확정·시행하는 순서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4일 지방자치 전문가인 김필두 박사를 초청해 의정 혁신방안 특강을 열었고, 이날 오후에는 사무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직원 난상 토론회를 열었다.

의정혁신추진단은 10월 말까지 의정 혁신 방안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정무창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서 나아가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해 광주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과정)
일 시 : 2022. 9. 1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9. 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 산 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타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